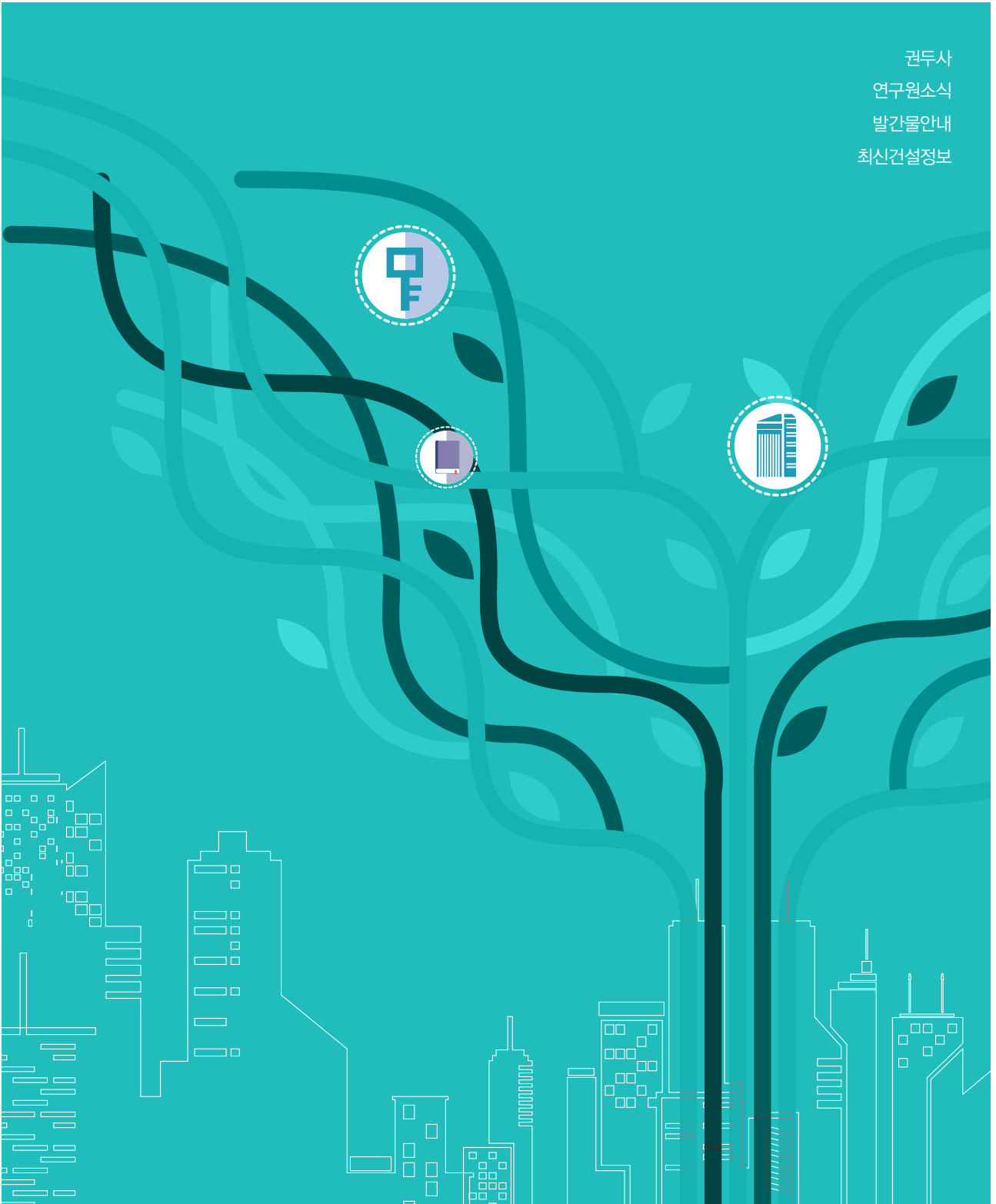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24호 2014년 5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최신건설정보



연구원, 협회, 조합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삼두마차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중 상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 및 전문건설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과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래 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 모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놓으며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씩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수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며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이런 이중고에 더해 하도급'乙'로서의 고충과 건설현장의 여건 악화까지 감내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일수록 업계의 이익대변과 권익보호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원, 협회 그리고 조합입니다. 이 삼두마차가 전문건설업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든든히 해줘야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래 짧은 역사와 넉넉치 못한 여건 속에서도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해안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건설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의 직무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제 3차년도 계약 체결

우리 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수행자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제의 3차년도 계약이 지난 5월 1일에 체결되었다.

3차년도 과제는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 정대운 연구원, 오치돈 연구원이 맡아 ‘전문건설업체 관리자·기술자의 직무역량을 고려한 교육모델의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1년(2014.5.1~2015.4.31)간 수행하게 된다.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4일, 우리 연구원이 수행중인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해외진출기업 간담회가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건설업과 제조업체 13개사와 종합건설업 및 엔지니어링업체 6개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동 과제는 우리 연구원이 지난 2012년 K-water 연구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단계로 수행중인 공동연구로서 박승국 연구위원, 김태준 선임연구원, 정대운 연구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부합동 ‘총체적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합동 점검반 활동 참여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정부합동 총체적 안전점검 시행에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고발생시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교량과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의 적정성과 재난대응체계의 실효성 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역별 점검을 실시했다.





건설인과의 KRIHS(국토연구원) 연찬회 참석

우리 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난 4월 17일,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린 것으로 국토연구원과 업계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연찬회의 주제와 관련해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에 발간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납품보증 도입 및 활성화 방안(2011-05)' 연구보고서를 통해 준조합원제도를 통한 보증수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4차 해외개발금융포럼,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발표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진출 대기업의 수주지원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국내의 하도급업체와 동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대형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해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업체들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포럼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수주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활동을 위해 2013년 11월에 창립된 것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해외건설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 위촉

우리 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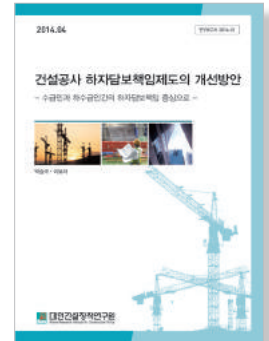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중심으로)

건설공사 하자관련 분쟁의 증가와 함께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 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자는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 자재공급자, 감리자, 유지관리·사용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관여되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합리적 사유없이도 하수급인이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간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담보 이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정책저널 봄호(통권 13호)” 발간

특 집

- 2014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논 단

- 해외 건설자재 구매조달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발전방향
- 2014년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주택시장 변화와 정책 과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내용 공개의 방안
- 전문건설 해외보증 실태와 애로사항

연구리뷰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건설동향

- 2014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 원내소식
- 업계동향



건설업체 경영자,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건설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경영전략 및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계간)로 발간·배포되는 건설정책저널이 지난 5월 23일 발간되었다.

동 간행물은 건설관련 이슈 등을 담은 논단과 함께 전문건설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주요 소식, 전문건설업 관련 정책·법령 개정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지난 5월 14일,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의 명단공표와 하도급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동 개정법률은 그간 건설산업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p>상습체불업체의 명단 공표</p>	<p>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대금체불 및 행정처분된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그 결과를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업체의 고의부도와 잠적으로인한 체불사례를 예방</p>
<p>하도급계약정보 공개</p>	<p>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계약정보만을 공개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까지 공개해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화</p>
<p>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p>	<p>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하던 종전의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원도급업체의 부당·과도한 하자책임전가를 방지</p>
<p>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p>	<p>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p>
<p>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하도급업체에게도 내용을 통보</p>	<p>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 여부와 중도해지 사실 등을 알도록 의무화</p>